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5407
----------	------

제안연월일 : 2024. 11.

제안자 : 법제사법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 대안에 주요내용이 반영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법안

연번	의안 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자	심사 경과	
1	2039	권칠승의원 등 13인	2024.7.19.	상정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2024.9.23.)
				소위 심사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1.5.)
2	3565	조은희의원 등 19인	2024.9.3.	상정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2024.9.23.)
				소위 심사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9.24.)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1.5.)
3	5124	서영교의원 등 10인	2024.10.31.	소위 심사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직접 회부(2024.11.5.)

- 대안에 일부내용이 반영되었으나 다른 부분의 계속심사를 위해 계류하는 법안

연번	의안 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자	심사 경과	
1	3828	박은정의원 등 12인	2024.9.9.	상정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직접 회부(2024.9.24.)
				소위 심사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9.24.)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1.5.)

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 11. 5.)에서 위 4건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되, 1~3의 법률안 3건은 대안에 주요 내용이 반영되었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1의 법률안 1건은 대안에 일부 내용이 반영되었으나 다른 부분의 계속심사를 위해 계류시키기로 함.

나.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6차 법제사법위원회(2024. 11. 8.)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정하여 신분을 비공개 하거나 위장하여 범죄행위 등에 접근하거나 관여하여 수사하도록 하는 이른바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의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수사만으로는 증거 확보가 어렵고 범죄자를 검거하기가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신분비공개수사·위장수사에 대한 근거가 없어 적극적인 수사와 처벌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의 특례를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촬영물·허위영상물 등 관련 범죄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사 대응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사법경찰관리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 현장에 접근하여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하는 신분비공개수사를 할 수 있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장 신분을 사용하는 등의 신분 위장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 신설).

나. 사법경찰관리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신분비공개수사를 할 때에는 사전에 상급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신분위장수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그 허가를 청구하도록 함(안 제22조의3 신설).

다. 사법경찰관리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긴급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긴급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4, 제22조의5 신설).

라. 사법경찰관리가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 등으로 수집한 증거 및 자료 등은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 및 소추, 징계절차 등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함(안 제22조의6 신설).

마. 사법경찰관리가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를 할 때에는 수사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본래 범의(犯意)를 가지지 아니한 자의 범의를 유발하지 않는 등 적법한 절차 및 방식을 따르도록 함(안 제22조의9 신설).

바. 사법경찰관리가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 중 부득이한 사유로 위법행위를 한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형사처벌, 징계,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도록 함(안 제22조의10 신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11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 ① 사법경찰관리는 제14조부터

제14조의3까지의 죄(이하 “디지털 성범죄”라 한다)에 대하여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현장(정보통신망을 포함한다)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하여 범죄행위의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이하 “신분비공개수사”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디지털 성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신분위장수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신분을 위장하기 위한 문서, 도화 및 전자기록 등의 작성, 변경 또는 행사
2. 위장 신분을 사용한 계약·거래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의 소지, 제공, 판매 또는 광고. 다만, 제공이나 판매는 피해자가 없거나 피해자가

성년이고 그 동의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가.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나.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

③ 제1항에 따른 수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3(디지털 성범죄 수사 특례의 절차) ① 사법경찰관리가 신분비공개수사를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수사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법경찰관리는 신분위장수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그 허가를 청구한다.

④ 제3항의 신청은 필요한 신분위장수사의 종류·목적·대상·범위

· 기간 · 장소 · 방법 및 해당 신분위장수사가 제22조의2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유 등의 신청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신청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법원은 제3항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분위장수사를 허가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허가서”라 한다)를 신청인에게 발부한다.

⑥ 허가서에는 신분위장수사의 종류 · 목적 · 대상 · 범위 · 기간 · 장소 · 방법 등을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⑦ 신분위장수사의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수사기간 중 수사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제22조의2제2항의 요건이 존속하여 그 수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리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수사기간의 연장을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그 연장을 청구한다. 이 경우 신분위장수사의 총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2조의4(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비공개수사) ① 사법경찰관리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제22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신분비공개수사를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 따른 신분비공개수사 개시 후 지체 없이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

리는 48시간 이내에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신분비공개수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분비공개수사 기간에 대해서는 제22조의3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제22조의5(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위장수사) ① 사법경찰관리는 제22조의2제2항의 요건을 구비하고, 제22조의3제3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 따른 신분위장수사 개시 후 지체 없이 검사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리는 48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신분위장수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분위장수사 기간에 대해서는 제22조의3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제22조의6(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로 수집한 증거 및 자료 등의 사용제한) 사법경찰관리가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5까지에 따라 수집한 증거 및 자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의 목적이 된 디지털 성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를 수사·소추하거나 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2.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의 목적이 된 디지털 성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로 인한 징계절차에 사용하는 경우
3. 증거 및 자료 수집의 대상자가 제기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는 경우

제22조의7(국가경찰위원회와 국회의 통제) 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가수사본부장(이하 “국가수사본부장”이라 한다)은 신분비공개수사가 종료된 즉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에 수사 관련 자료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가수사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신분비공개수사 관련 자료를 반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의8(비밀준수의 의무) ①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5까지에 따른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승인·집행·보고 및 각종 서류작성 등에 관여한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비밀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9(준수사항) 사법경찰관리는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5까지에 따른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를 할 때에는 수사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본래 범의(犯意)를 가지지 않은 자에게 범의를 유발

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등 적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 한다.

제22조의10(면책) ① 사법경찰관리가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 중 부득이한 사유로 위법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법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③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도 사법경찰관리는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2조의11(수사 지원 및 교육)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은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를 승인하거나 보고받은 경우 사법경찰관리에게 수사에 필요한 인적·물적 지원을 하고, 전문지식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방법 및 수사절차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2조의8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p><u>제22조의2(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 ① 사법경찰관리는 제14조부터 제14조의3까지의 죄(이하 “디지털 성범죄”라 한다)에 대하여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현장(정보통신망을 포함한다)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하여 범죄행위의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이하 “신분비공개수사”라 한다)할 수 있다.</u></p> <p><u>② 사법경찰관리는 디지털 성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신분위장수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u></p> <p><u>1. 신분을 위장하기 위한 문서,</u></p>

도화 및 전자기록 등의 작성,
변경 또는 행사

2. 위장 신분을 사용한 계약·
거래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촬영
물 또는 복제물 등의 소지,
제공, 판매 또는 광고. 다만,
제공이나 판매는 피해자가 없
거나 피해자가 성년이고 그
동의를 받은 경우로 한정하
다.

가.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
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
물을 포함한다)

나.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
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
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에 관한 법률」 제2조제5
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
착취물

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
에 따른 정보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수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3(디지털 성범죄 수사 특례의 절차) ① 사법경찰관리가 신분비공개수사를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수사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법경찰관리는 신분위장수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그 허가를 청구한다.

④ 제3항의 신청은 필요한 신분위장수사의 종류·목적·대상·범위·기간·장소·방법 및 해당 신분위장수사가 제22조의2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유 등의 신청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신청사

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법원은 제3항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분위장수사를 허가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허가서”라 한다)를 신청인에게 발부한다.

⑥ 허가서에는 신분위장수사의 종류 · 목적 · 대상 · 범위 · 기간 · 장소 · 방법 등을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⑦ 신분위장수사의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수사기간 중 수사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제22조의2제2항의 요건이 존속하여 그 수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리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수사기간의 연장을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그 연장을 청구한다. 이 경우 신분위장수사의 총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 설>

<신 설>

제22조의4(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비공개수사) ① 사법
경찰관리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제22조의3제1항 및 제2
항에 따른 절차를 거칠 수 없
는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승
인 없이 신분비공개수사를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 따
른 신분비공개수사 개시 후 지
체 없이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
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리는 48시간 이내에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
의 승인을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신분비공개수사를 중지하
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
분비공개수사 기간에 대해서는
제22조의3제1항 후단을 준용한
다.

제22조의5(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위장수사) ① 사법경
찰관리는 제22조의2제2항의 요
건을 구비하고, 제22조의3제3항

<신 설>

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신분
위장수사를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 따
른 신분위장수사 개시 후 지체
없이 검사에게 허가를 신청하
여야 하고, 사법경찰관리는 48
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
지 못한 때에는 즉시 신분위장
수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
분위장수사 기간에 대해서는
제22조의3제7항 및 제8항을 준
용한다.

제22조의6(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
수사로 수집한 증거 및 자료
등의 사용제한) 사법경찰관리
가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5까
지에 따라 수집한 증거 및 자
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사
용할 수 없다.

1.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
장수사의 목적이 된 디지털

<신 설>

성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를 수사·소추하거나 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2.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의 목적이 된 디지털성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로 인한 징계절차에 사용하는 경우

3. 증거 및 자료 수집의 대상자가 제기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는 경우

제22조의7(국가경찰위원회와 국회의 통제) 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가수사본부장(이하 “국가수사본부장”이라 한다)은 신분비공개수사가 종료된 즉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에 수사 관련 자료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가수사본부장은 대통령령

<신 설>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신분비공개
수사 관련 자료를 반기별로 보
고하여야 한다.

제22조의8(비밀준수의 의무) ①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5까지
에 따른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승인·집
행·보고 및 각종 서류작성 등
에 관여한 공무원 또는 그 직
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
위장수사에 관한 사항을 외부
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비밀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2조의9(준수사항) 사법경찰관

리는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5
까지에 따른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를 할 때에
는 수사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본래 범의(犯意)를 가지지 않은
자에게 범의를 유발하는 행위
를 하지 않는 등 적법한 절차

<신 설>

<신 설>

와 방식을 따라야 한다.

제22조의10(면책) ① 사법경찰관
리가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
분위장수사 중 부득이한 사유
로 위법행위를 한 경우 그 행
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
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법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하더
라도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 요
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③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
위장수사 행위로 타인에게 손
해가 발생한 경우라도 사법경
찰관리는 그 행위에 고의나 중
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제22조의11(수사 지원 및 교육)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
은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
위장수사를 승인하거나 보고받
은 경우 사법경찰관리에게 수

<p>제5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u><신 설></u></p> <p><u>1. · 2.</u> (생략)</p> <p>② ~ ⑤ (생략)</p>	<p><u>사에 필요한 인적·물적 지원을 하고, 전문지식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방법 및 수사절차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u></p> <p>제50조(벌칙) ① ----- ----- ----- -----.</p> <p><u>1. 제22조의8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u></p> <p><u>2. · 3.</u>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	--